

李-트럼프, 25일 백악관서 정상회담... “한미동맹 발전 방안 논의”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2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다. 이 대통령 취임 82일 만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8월 25일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24일 출국할 예정으로, 밤미 일정에 김해경 여사도 동행한다.

이번 회담에서는 앞서 타결된 관세 협상의 세부 내용을 확정하고 한미동맹과 국방비 증액 문제 등 외교·안보 현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 대변인은 “두 정상은 변화하는 국제 안보 및 경제 환경에 대응해 한미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균정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 구축과 비핵화를 위한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관세 협상 및 경제 분야와 관련해서는 “반도체, 배터리, 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를 포함한 경제 협력과 첨단 기술, 핵심 광물 등 경제 안보 파트너십을 양국 간에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양국 정부는 공동성명을 목표로 막판 의제를 조율 중이다. 공동성명이 발표될 경우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 속에서 한미일 3국 안보협력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24~26일 미 실무방문... 취임 82일 만 미 정상 첫 대면

관세협상 확정하고 한미동맹·국방비 증액 등 의제로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비핵화 공조 방안 등 논의”

“반도체·배터리·조선업 등 제조업 포함 경제협력 협의”

“첨단 기술·핵심 광물 등 경제 안보 파트너십 강화”

방미 앞서 방일 가능성엔 “여러 가지 가능성 타진”

미국 측이 요구하고 있는 ‘한미동맹의 현대화’가 핵심 의제로 부상 중인 가운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협의를 이룰지 관심이 쏠린다.

미국은 ‘동맹 현대화’라는 개념 속에서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주한미군 규모와 역할 변화 등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도 안보 분야 의제로 거론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미국 측의 공식 요청은 아직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미 측은 대만 문제 등에서 한미동맹이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어 이번 회담이 이재명 정부 실용 외교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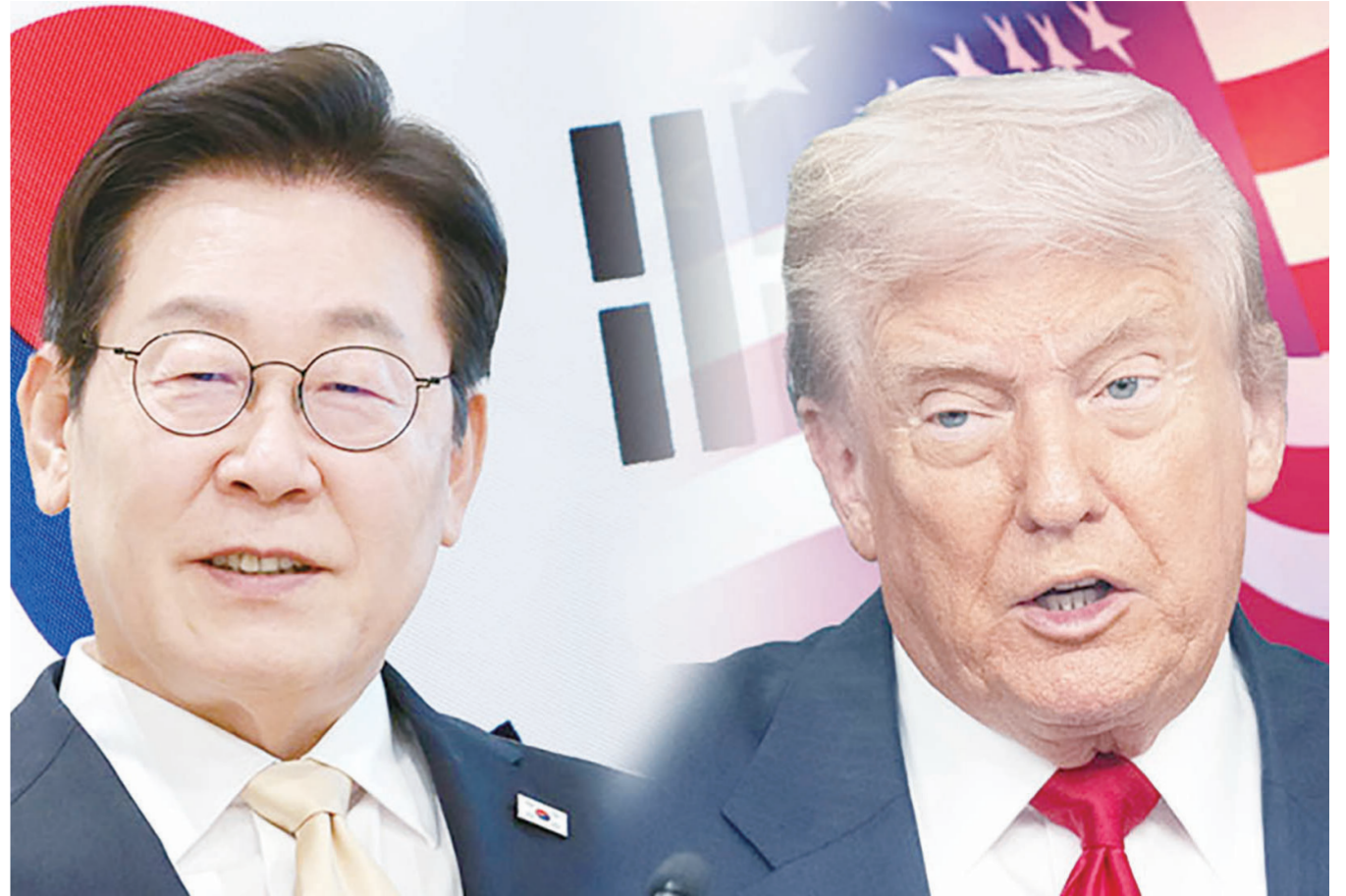
한미 관세 협상 세부 사안 논의도 힘겨루기가 불가피하다. 대미 투자 규모는 3500억달러로 큰 틀에서 정해졌지만, 반도체와 이차전지, 조선업 협력까지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투자가 이뤄질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미 투자 펀드 수의 배분과 농축산물 추가 개방 여부 등은 미국 쪽과 말이 엇갈리고 있어 명확한 정

리가 필요하다.

반도체 등 품목 관세율도 관건이다.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반도체와 의약품 등에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집적회로와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하고, 의약품에 대해서는 최대 250%까지 관세를 물릴 수 있다고 언급하는 등 불투명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의 방미 형식은 국빈 방문이 아닌 실무 방문으로 결정됐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 간 상호 관심 의제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하는데 초점을 둔 방문이라고 볼 수 있다”며 “공식 방문과 달리 환영식은 생략된다고 보면 될 듯하다”고 말했다.

한미 회담에 기업인이 동행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관세 협상 당시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이어 정인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미국으로 향하는 등 기업인의 협상 측면 지원 움직임이 이어졌다. 이 회장은 관세 협상 이후에도 미국에 머무를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양국 정상



이 정상회담을 할 때 한국의 구체적 대미 투자 금액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고, 하워드 러트너 미 상무장관은 한국 기업들이 대규모 대미 투자를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강 대변인은 그룹 총수와 경제단체장의 동행 여부에 대해 “경제 협력 과정에서 가능할 수 있겠으나 아직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협의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다”고 답했다.

방미 기간 한국 기업이 인수한 미국 조선소 방문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

능할 수 있지 않을까 예측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방미 기간 한화그룹이 인수한 필리핀조선소를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상회담이 25일 성사되며 이 대통령은 취임 82일 만에 미국 정상과 단독 양자 회담을 하게 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04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79일, 인수위가 없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후 81일 만에 한미 정상 회담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후 5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7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첫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등 비교적 이른 시일 내 회담이 성사됐다.

이 대통령의 방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일본을 방문하는 일정을 조율해 왔다.

강 대변인은 “한일 정상회담은 ‘서들 외교’를 재개하려는 양국 교감 속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며 “일본 관련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아동수당 13세 미만까지 확대... 요양병원 중증 간병비 본인부담 30% 이내로

국정기획위, 13일 123대 국정과제 발표... 공공의대·지역의사제는 언급 안 될 듯

현재 8살 미만까지 받는 아동수당을 13살 미만까지 주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요양병원 중증환자 간병비 본인부담을 현행 100%에서 30% 아래로 줄이는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가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국정위가 준비하고 있는 123대 국정과제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복지 분야 정책들이 구체화됐다. 국정위는 오는 13일 오후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와 관련한 내용들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원기준은 현행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에서 203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35% 이하’로 확대한다.

요양병원 중증환자 간병비 본인부담은 현행 100%에서 2030년 30% 이내로 대폭 줄인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장애연금 수급자도 ‘중전 1·2급 및 3급 중증’에서 2030년 ‘중전 1·2급 및 3급 단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현재 34만9000명에서 58만4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아동수당은 대상을 현행 8세 미만에서 2030년 13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이 경우 지급 대상은 현행 215만명에서 344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앞서 대선 기간 아동수당 대상을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보다 연령이 하향 조정됐다.

이와 같은 생계급여 지원 확대, 요양병원 중증 간병비 지원, 장애인연금 확대, 아동수당 확대 등의 정책들은 12대 중점 전략 과제에 담길 전망이다.

국정위는 청년 대상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군복무 크레딧 확대, 출산 크레

딧 사전 지원, 기초연금 부부간액 및 국민연금 감액 개선 등 연금제도를 손보겠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그밖에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위기아동 청소년·청년 지원 강화, 출산·육아 지원 확대, 상병수당 도입 등의 복지 정책 역시 국정과제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위는 보건정책과 관련해선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해 필수요료를 확충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주요 대통령 공약으로 제시됐던 공공의대 신설이나 지역의사제 추진은 이번 발표에선 언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정책들은 의료계의 거센 반대가 예상되는 사안들로, 향후 공론화 과정을 통해 추진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뉴시스

이 대통령 “후진적 산재 공화국 반드시 벗어나야... 엄정 제재”

“중국 공관 앞 혐오 시위, 대한민국 어떻게 보이겠나”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거듭된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해 “필요하면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사람 목숨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느냐”며 “살기 위해서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출해야 할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다 하는 것은 전에도 많았지만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란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했는데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안전조치 안 하는 근본적(원인) 따지면 돈 때문이다. 목숨보다 돈 더 귀하게 여기는 풍토가 원인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결책은 안전조치를 안 하

는 것은 바보짓이란 생각이 들게 하면 되는 것이다. 그게 더 손해가 되게 하면 되는 것”이라며 “일상적으로 산업현장을 점검해야 필요한 조치를 안 하면 엄정 제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건설현장과 관련해서는 ‘위험의 외주화’라고 불리는 하도급 문제를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건설현장은 하도급, 재하도급이 원인이다. 하도급이 반복되면서 실제 공사비가 줄어들다 보니 안전조치를 할 수가 없다”며 “구조적 문제로 건국 이래 반복된 일이나 쉽게 바뀔 거라 생각하진 않지만 이번엔 반드시 뜯어고치도록 해야겠다”고 주문했다.

이어 “위험의 외주화, 위험한 작업은 하청을 두거나 외주를 둔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책임은 안 지고 이익은 보겠다는 건 옳지 않다”며 “필요하면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 산재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얼마 전에 중국 외교 공관 앞에서 표현의

자유라고 하기 어려운,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는 혐오 시위가 벌어졌다”며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모범 국가라는 대한민국의 위상에 결코 걸맞지 않은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 과연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일지 생각해 보면 좋겠다”며 “전 세계가 K-문화에 열광하며 주시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익과 국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를 향해 “이주 노동자, 외국인 또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 또 인권 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필요하면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중대 재해근절 대책과 관련한 심층 토론회를 생중계로 공개했다. 국무회의 토론회가 생중계된 것은 역대 정부 최초다. 이날 회의에서도 산업재해와 관련한 모두발언이 KTV를 통해 생중계됐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대남 확성기 철거 움직임도 거론하며 “상호적인 조치를 통해서 남북 간의 대화와 소통이 조금씩 열려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뉴시스

완도해양치유센터

완도, 그리고 힐링

함께라서 더 좋은 치유

할인 EVENT!

가족(3인 이상) 30%

단체(10 이상) 20%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 10%

위 치 > 전남 완도군 신지면 해양치유길 100
Tel. 061) 550-7675 ~ 6 / 인터넷(홈페이지) 예약 필수

프로그램 >	기본 ①	기본 ②	디럭스	프리미엄	전문 수중 재활
대인	36,000원	28,000원	80,000원	125,000원	1:1 90,000원
소인	26,000원	22,000원			2:1 70,000원

* 안전상의 이유로 36개월 미만은 입장이 불가합니다.